

# SSM법 대립 격화… 예산국회 戰雲

한나라 “순차처리를” 민주당 “일괄처리 해야”

4대강 예산·개헌 논의 등 맞물려 충돌 불가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예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여야 합의대로 SSM 규제법을 순차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은 유통법·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유통법 상정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오늘이라도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출범 이후 양당 간 합의가 처음으로 깨졌다”면서 “민주당 내 일부 강경 지도자들이 SSM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에 강경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원내공보부대표도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 상생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공사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우리의 합의대로 조속히 통과하고, 상생법을 합의한 대로 본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유럽 의회에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 제한 조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양국이 재협상을 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된

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SSM법 동시 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전병현 정책위의장은 “한-EU FTA 분쟁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25일 처리하나

11월에 처리하나 12월에 처리하나 1월 달에 처리하나 한-EU FTA에 있어서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굳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분명 해진 만큼 민주당은 다시 한번 더 이상 소상공인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상생법과 유통법을 신속하게 병행해서 애초 약속대로 처리해줄 것을 한나라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SSM 규제법 갈등은 향후 예산심의에서 4대강 예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향후 예산심의와 재정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SSM 규제법에 대한 여야간 대립은 예산 국회에서 전초전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선명한 대립각이 나타날 4대강 예산 심의와 개헌 논의의 재점화 등이 맞물리면서 예산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개혁적 중도보수로 패러다임 전환”

안상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6일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개혁적 중도보수론’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소득 7분위(70%)까지 아우르는 명실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맞춰 당의 강령을 중도 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중도보수의 가치를 담은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법치주의의 엄정 준수 ▲경제적 공정 확립 ▲서민생활 불공정 사례 적발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 등 4대 과제를 내걸었다.

안 대표는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제, “중소기업이 동

반 성장해야 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기업이 선진화돼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존립이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후속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는 ▲학생들이 각 과목 전용교실로 찾아가는 ‘교과교실제’와 전문과목을 선택하는 ‘교과중점학교’ 확대 ▲마이스터고·기술형 고교 확충 ▲▲▲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제 우리 역량에 맞는 ‘한반도 전략’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제거한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더불어 잘사는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한반도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60세 정년 법으로 보장해야”

한나라 강성천 의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자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생산인구 감소, 고속련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을 하락,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 재정부실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60세 정년을 법으로 보장하고, 선진국처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원칙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6일 60세 정년의 법적 의무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장기적 시각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 정

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석준 한국노총 위원장도 “청년실업률 빌미로 종·고령층 정년 연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60세 정년 법안을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한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는 종·고령층 고용률을 할당제도, 특정연령 미만의 정년제 원칙적 금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춘 정년 상향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을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 228-0990, 010-8494-9484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 꿈꾸는 공주 ]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자구력이 담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08 안향연

사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생노봉사 불노경봉 책을 드립니다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 입니다.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 입니다.

앞서 그는 FTA와 관련, ‘재협상론’을 내세우면서 “책임 있는 야당이 입장 하나 못 가진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최고위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하는 법안을 분리 처리로 합의한 원내지도부의 방침을 뒤집고 ‘일괄 처리’를 관철했다.

22일에는 민주당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자문위원으로 내정된 일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반(反)민주 성향’이라고 규정, “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비판, 자문위원직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그는 앞으로 전대 공약인 부유세 신설 문제까지 꺼내 들면서 선명 행

보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대선 경쟁 상대인 손학규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행될 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가족행복시대’를 내걸며 실용 노선을 택했던 그가 이제와서 진보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기 대선 도전 등을 염두에 두는 정략적 행보라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초청

관훈클럽

2010. 10. 26

한국프레스센터 20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학규 “개헌, 차기 정권서 논의해야”

### 관훈클럽 토론회 “대통령 4년 중임 검토 가치 있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입장 밝혔다. 그러나 손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손 대표는 2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 내지는

잠재 후보들이 개헌안 또는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안을 만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개헌 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억지”라며 “(여권이) 개헌 논의를 끼워내는 것은 그 자체가 멀찌빠지 못한,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악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일부에서도 찬동하는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현 제도에서 대통령 권력과 권리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권한 분산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했다.

특히, 그는 “우리처럼 정치적 분파가 심하고 특히 지역적 분파가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살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와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에 현법에 보장된 권한을 주면 권력의 효율적 운영과 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5년 단임제로 한 권력구조, 대통령 임기 문제는 당시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 구도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동영, 연일 ‘강경 행보’… 선명성 주문

### SSM 일괄처리·FTA 재협상론·진보 이슈로孫견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연일 ‘강경 진보’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최고위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하는 법안을 분리 처리로 합의한 원내지도부의 방침을 뒤집고 ‘일괄 처리’를 관철했다.

22일에는 민주당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자문위원으로 내정된 일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반(反)민주 성향’이라고 규정, “당 정체성이 아니라 당현과 강령, 당원의 요구와 생각이 정체성”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전대 공약인 부유세 신설 문제까지 꺼내 들면서 선명 행

보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대선 경쟁 상대인 손학규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행될 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 공약으로 ‘담대한 진보론’을 내걸었던 그는 지난 6일 “전대에서 진보적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며 “대표 개인의 생각이 당 정체성이 아니라 당현과 강령, 당원의 요구와 생각이 정체성”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전대 공약인 부유세 신설 문제까지 꺼내 들면서 선명 행

보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대선 경쟁 상대인 손학규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행될 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가족행복시대’를 내걸며 실용 노선을 택했던 그가 이제와서 진보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기 대선 도전 등을 염두에 두는 정략적 행보라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